

증시 안정 대책은 언제쯤

현재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 불균형이다. 證安기금이 해체될 운명이고 기관들의 순매수 여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의 가능성성이 크고 부양 조치가 없다면, 800포인트 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 2조 원대인 신용 률이 추가로 3,000억 원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가 주식 시장의 고비이다.

현재 주식 시장의 자생력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 안정 대책과 관련된 각종 투머에 따라 주가지수가 심한 일교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장세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증시 안정 대책이 계속 지연될 경우 또 한차례의 주식 투매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시장 안정 대책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가치, 수급, 자금 사정 등 증시의 기본 요건은 철저히 무시되고 증시 대책 실시 시기가 사실상 주가를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시 부양책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표될 것인가. 현 시장 및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4월 총선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가 관리에 나설 것이다.

제한된 범위 내의 등락 거듭

현재 주가는 금리와 기업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나, 주식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경

과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채권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과의 차이인 수익률 스프레드 등을 이용하여 주가 수준을 비교해보면, 현재 주가 수준은 지난 1992년과 같은 저평가 국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연착륙에 대한 논쟁과 취약한 증시 수급 여건 그리고 총선을 앞둔 시장 외적 요인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의 시장 에너지 축적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종합지수 800포인트가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 발표가 기대되어 지수의 급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 부양책의 내용으로 기관들의 순매수가 포함될 경우 시장의 수급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그 내용 및 강도에 따라서 의외의 큰 반등세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증시 부양책이 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장세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기에는 증시 수급의 개선뿐 아니라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4분기까지는 900포인트 선을 전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